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전매체) 2026. 11. 12.(목) 배포즉시

민·관이 함께 메가프로젝트 성과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역할 강화방안 논의

- 중기부,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성과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역할 강화방안**」 보고
- 메가프로젝트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회가 되도록 ① **공급망 신규진입 촉진**, ②**상생과 제조역량 강화를 통한 협력기업 성장 지원**, ③**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1월 12일(목), 삼성전자 아산사업장 온양캠퍼스에서 개최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성과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역할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 기업인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대 권역별 메가프로젝트 중소기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11월부터 가동하여 중기부가 중소기업-대·중견기업-중앙·지방정부의 연결자 역할을 수행한다.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는 대·중견·중소기업이 공급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분야로, 상생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공급망에 새롭게 참여하길 희망하는 중소기업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중소기업과 앵커 대기업, 중견기업간 연결 강화를 추진한다. 이번 달 내로 5대 권역별로 메가프로젝트 관련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프로젝트 참여 수요와 참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협의회 논의사항은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 등 민·관 합동 협의체에 전달·보고하여 대·중견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연결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방 이전 기업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애로를 개선한다.

특히, 공급망 신규 진입 희망기업과 기존 협력기업의 현장 요구가 달라, 다음과 같이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한다.

◇ 역량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신규 투자에 따른 공급망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대기업 및 상위 협력사가 필요한 기술·품목을 조사·발굴하여 5대 권역별 협의회에 전달하고, 개발 가능한 중소기업을 연결한다.

또한 공급망 진입에 필요한 실증과 연구개발 및 협력 과정에서의 전략적 투자도 지원한다. 협력 희망기업 혹은 협력사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상위 협력사가 협력사에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등을 통해 지원한다.

메가프로젝트 분야와 기술·설비·인력이 인접한 기업을 발굴하여 메가프로젝트 관련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자금, 기술개발 등 사업전환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상생과 제조역량 강화를 통해 메가프로젝트 협력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앵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존 협력기업들은 메가프로젝트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권역에의 신규 설비투자와 제조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양산이 본격화에 대비해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메가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내 전용 재원 조성, 대기업 등 출연을 통한 투융자 자금 등 '30년까지 총 2조 원 규모의 상생 재원을 조성한다. 이를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기술협력을 통한 공급망 국산화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설비투자 → 발주 → 생산 → 대금수령' 단계별 유동성 애로도 지원한다. 지역 프로젝트파이낸스 보증 신설을 통해 지역 생산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발주서 기반의 생산자금 융자 지원, 상생결제의 2차 이하 협력사 확산 추진 등을 통해 중간 자금 공백을 지원한다.

대량·적기 생산을 위한 스마트제조역량 고도화도 뒷받침한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29일(목), 수요·공급기업과 데이터, 지역·인재를 아우르는 「중소제조 피지컬AI 확산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30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디지털 전환, AI 전환을 지원하고, 피지컬AI 선도모델 실증,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메가프로젝트 관련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소재함에 따라, 지역 창업 활성화, 기존 지역기업의 고도화 등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앵커기업,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5년간 2조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여 메가프로젝트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도시도 현재 조성 추진 중인 4곳에 더해 6곳을 추가 지정하여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광역 간 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 실증, 생산, 판로 등 부족한 기능을 타 지역과 협업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국가 성장 전략 및 지역 수요에 기반한 지역주력산업 개편도 연내 추진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국가 역량이 총동원되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중소기업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급망 진입의 문을 열어주고, 협력 대·중소기업간 구조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대·중견기업, 중앙·지방정부 간 연결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메가프로젝트로 열릴 대규모 시장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중소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경필 (044-204-7420)
		담당자	서기관	박민지 (044-204-7422)
			사무관	김태우 (044-204-7470)
			사무관	정충준 (044-204-7425)
			주무관	양아름 (044-204-74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